

홈 > 뉴스 > 문화 > 책/서평

중죄인 심문기록 ‘추안급국안’, 국문 번역

2014년 09월 26일 (금)

김미진 기자



추안급국안 번역서

조선 후기 의금부에서 역모 사건과 같은 중죄인들을 체포해 심문한 기록인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이 국문으로 번역돼 발간됐다.

전주대(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추안급국안’을 완역해 ‘국역 추안급국안’ 전 90권을 간행하는 방대한 성과를 올린 것. 지난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한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의 지원 과제로 시작된 ‘추안급국안’번역사업의 마침표를 10년 만에 찍게 된 셈이다.

‘추안급국안’은 선조 34년(1601)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17세기 초에서 19세기 말까지 약 300년 동안 변란, 역모, 천주교, 왕릉 방화 등에 관련된 중죄인들을 체포·심문한 기록이다. 심문 대상자는 신분상으로 양반에서 노비까지, 직역으로 관료와 상인, 농민과 궁녀 등이 망라돼 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추안급국안’에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 등 다른 역사서와 큰 차

이를 보인다.

‘조선왕조실록’등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사건의 개요만을 서술되기에 하층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만, ‘추안급국안’에서는 사건의 당사자뿐 아니라 이웃집 사람, 친족, 상전, 만난 사람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각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선 모습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간관계와 베일에 싸여 있던 궁중 내부의 갈등과 같은 조선 후기 역사적 사건의 속살을 드러내 보인다.

때문에 이번 ‘국역 추안급국안’의 발간의 의미는 남다르다.

그동안 한문의 장벽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했던 사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만큼, 전근대 민중생활사와 법제사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서술이 풍부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조선시대 정치사·사회사 정보망 구축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역모사건의 진실 규명과 사건 가담자들의 내면의 모습, 권력을 둘러싼 갈등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 소재로 활용될 풍부한 원천 정보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내용뿐 아니라 ‘국역 추안급국안’은 연구 기간과 결과물에서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의 번역과제 중에는 가장 방대한 규모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기 충분해 보인다. ‘국역 추안급국안’의 번역 분량은 원문 글자수기 약 672만6,000자에 이르며, 영인본으로는 30권 분량에 해당된다. 번역문이 200자 원고지 15만 매에 달하는 등 고전번역의 단일 사업으로는 최고의 결과물을 지역의 대학에서 완성했다는 점에서 학계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번역에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사상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번역은 변주승(연구책임자, 전주대), 김우철(한중대), 조윤선(한국고전번역원), 이상식(고려대), 이향배(충남대), 이선아(전북대), 허부문(서강대), 오항녕(전주대), 서종태(전주대), 문용식(전주대) 등 전문 번역자와 전주대 사학과 대학원의 연구보조원 등 약 3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해 3년 동안의 집중 번역과 7년에 걸친 윤문 및 교열 과정을 거쳤다.

변주승 연구책임자는 “‘추안급국안’에는 정치적인 것을 빼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특히 심문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조선시대 생활사도 중요하게 읽어달라”고 말했고, 오항녕 교수는 “흔히 조선시대 추국이 야만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철저한 규칙과 과정 충분한 의사결정 속에서 이뤄지는 문명적 행위였던 만큼 자료가 갖는 현장성과 포괄성, 체계성에 주목해 연구의 성과를 봐달라”고 설명했다.

김미진 기자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